

5·18진상조사위 청문회도 못하고 시한 끝나나

12월 26일 활동 종료 앞두고
최종보고서 작성 등 일정 빠듯
직권조사 21건 중 의결 1건 뿐
국방위 국감서 지지부진 질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밀린 조사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법상 조사위는 오는 12월 26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는데, 시한을 2개월여 앞둔 지금까지도 청문회 개최, 직권조사·신청사건 등 심의·의결, 최종 보고서 의결을 위한 법 개정 등 과제가 술하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아직까지 조사위가 5·18 진압 책임자들에게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를 2023년 3월까지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아직도 청문회를 열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실제로 지난 1월 청문회 준비소 위원회를 발족하고 한 달여간 네 차례 회의를 한 것이 전부였다. (8월 22일자 광주일보 6면)

송선대 조사위원장은 “직권조사 과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중에 청문회를 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1995-1997년 검찰 수사,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등 기존 조사와 다르게 새로 밝혀낸 사실과 이에 대비되는 내용을 대조해야 하는



송선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 아직까지 조사가 완료된 것이 없어 주제조차 정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16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문회 주제,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직권 조사 등 심의·의결이 지지부진해 청문회 주제를 정하는 것조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현재 조사위가 21개 직권조사 중 심의·의결한 것은 1건 뿐이며, 2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데 그쳤다. 신청사건 또한 총 216건 중 16건만 심의·의결했으며, 각각 취하건을 제외하고 116건을 여전히 조사 중이다.

송 위원장은 “이달부터 직권 사건을 하나하나 의결하고 있다”며 “보완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를 감안해 활동 종료 일주일 전인 12월 20일까지는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심의·의결할 조사위원들의 임기도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조사위는 활동 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조사위원들의 임기가 12월 26일까지만 있다. 결국, 보고서를 심의·의결할 조사위원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된다.

송 위원장은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의결하고 채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대로 임

기가 종료된다면 입법 미비 상태가 방지되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밖에 조사위는 전두환씨가 광주 진압 작전 계획을 주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전두환씨가 계엄사령관 등을 겸임하면서 격일로 국방부장관실을 찾아가 광주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증거, 군 자위권 천명을 강조하는 문서에 “전 각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는 점 등이다.

송 위원장은 “강제성 없는 조사권 때문에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뚜렷했고, 검찰 수사관 파견도 못 받는데다 3년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조사가 차질이 컸다”면서도 “전 과정에 대한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 회부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일부 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 5·18평화·외국 발언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기고에 대해 공격을 했다던지, 아세아자동차 탈취라던지 속편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외국군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하며 “이와 관련된 논문을 쓴 지만원 박사 등을 정중히 모셔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5·18 당시에 하나회 조직을 이용했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다”며 “예비사단들이 광주로 투입된 것이지, 하나회라서 투입됐다고 하면 군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광주 남구 정율성 흉상 또 훼손 보수 유튜버 “내가 철거했다”

최근 정부와 광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 정율성 흉상이 수난을 겪고 있다.

15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전날 새벽 5시 50분께 “광주시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정율성 흉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남구 당직실에 접수됐다.

최근 훼손된 정율성 흉상이 신원 미상의 인사에 의해 기단 위로 올려졌으나 하루만에 다시 훼손된 것이다.

지난 2일 정율성 흉상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한 윤모(56)씨가 화물차에 밟혔을 걸어 흉상을 훼손했지만 지난 13일 흉상이 기단위로 올려졌다.

하지만 하루만에 흉상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기단 상단 모서리가 일부 깨지고 금이 갔다.

윤씨는 지난 14일 보수 유튜버 채널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흉상을 훼손했다”고 또 자신이 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영상에서 윤씨는 “이것은 마귀의 흉상이다. 이번에도 목에 확실하게 줄을 걸어 부숴버렸다”며 “나만 조사하지 말고 흉상을 복원한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1914-1974) 흉상은 2009년 7월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세워졌다. 광주시는 한·중교류의 상징인 정율성 선생을 기리기 위해 동구 불로동 생가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여당, 보수단체 등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행적을 이유로 광주시에 공원 사업 철퇴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학부모 10명 중 6명 “대입개편 수학 중요해질 것”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으로 수학과목의 더 중요해질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로학원은 중2 이하 학부모 969명, 중3 학부모 116명 등 모두 10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5일 밝혔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8%가 가장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과목으로 ‘수학’을 꼽았고, 국어(34.8%), 과학(2.6%), 사회(2.0%)가 뒤를 이었다. 영어를 꼽은 응답자는 0.9%에 불과했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영역이 고1 과목인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바뀌면 난도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수학·국어의 변별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대입개편으로 내신과 수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수능이라는 응답 비율이 64.2%, 내신은 35.8%였다.

현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평가 체제가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될 경우 내신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지법 “5·18부상자회장, 상벌위원 직위해제 권한 없다”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간부들이 황일봉 회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간부 6명이 황일봉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상벌위원을 사직한 A씨와 상벌위원 자격이 없는 B씨의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했다.

황 회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을 징계하려는 상벌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사무총장·조직국장·상벌위원장·상벌위원 등 집행부 7명을 회장 직권으로 직

위 해제했다. 이에 맞서 집행부 6명은 직위해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상벌위원은 4년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점, 회장에 상벌위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이 없는 점, 직위해제는 인사상 처분에 해당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결정을 두고 반 황 회장 측은 “상벌

위원들의 직위가 인정됐으므로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상벌위 심사를 거쳐 황 회장을 징계한 것 또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상벌위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황 회장은 “회장 징계안을 의결한 이들은 무자격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2명으로 무효”라며 “16일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법원에 지난 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고려인 마을 피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속속 귀국길

최근 7명 향수병 못이겨 돌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피해 광주시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정착했던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들이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15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전쟁을 피해 지

난해 4월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 박예릭(72)씨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

박씨와 같이 고려인 마을에서 고향을 그리워 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이들은 7명에 달한다.

박씨는 입국 후 친인척이 살고 있는 고려인마을의 한 원룸에서 거주했지만, 고향 땅을 잊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인마을이 박씨의 거주지를 텃밭 등이 있는 넓은 텃밭으로 이주시켰으나 안식을 찾지 못했다.

최근 아내가 큰딸이 있는 독일로 출국하자 박씨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건강이 악화돼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가

지 받았다.

박씨는 최근 고향인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지역이 우크라이나에 수복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고향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됐다.

그는 독일에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고려인마을에 알렸다.

한편 광주고려인마을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876명에게 광주 정착을 위한 항공권을 지원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수목장(자연장)을 무료로 안치해드립니다.
(회원에 가입 한 분에 한함)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